

정책 태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에서의 국가 책무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노 법 래*

..... <目	次>
I. 서론	IV.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II. 선행연구	V. 분석결과
III. 이론적 배경	VI. 요약 및 결론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에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 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결과변수의 도출과 조작화에 이론적 배경을 결여하고 있거나 중요한 설명변수의 누락과 같은 한계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해서는 Salter(1998)와 권혁주(2009)가 제시한 사회 정책에서의 “정치적” 혼합에 관한 이론적 틀을 차용하면서 주요 설명변수를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계급간 균열보다는 교육, 연령, 정책 경험과 같은 다양한 지위 변수들이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세대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적 균열이 가능함을 발견했으며, 정책 경험과 관련해서는 만족도와 같은 질적 측면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의 규모나 가족 해체의 경험과 같은 가족의 특성 또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셋째, 복지와 근로동기의 조화나 정치적 보수성과 같은 신념체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아울러 확인하였다.

【주제어: 정책 태도, 사회 정책, 국가 책무성, 정책 보편성】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seeme@daum.net)
논문접수일(2012.11.2), 수정일(2012.12.19), 게재확정일(2012.12.22)

I. 서론

복지국가가 2012년 대선의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는 등, 최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뜨거운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 복지국가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접어드는 전조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지평이 어떤 양상을 이루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학술적 차원에서나 정치적 차원에서나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흥미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른바 서구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주요 이론가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복지국가의 축소와 개편을 예견했지만(Korpi, 1980; O'Connor, 1973; Offe et al, 1984),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개혁이 활발히 논의된 영미 자유주의국가에서도 복지국가의 뚜렷한 축소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Pierson (1996)은 민주주의체제 하의 분권화와 제도의 안정성 추구경향과 아울러 Weaver (1986)의 “비난회피의 정치”를 인용하며 복지국가를 둘러싼 전통적인 계급 동원을 통한 정치 지형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의 지형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논의는 사회정책의 도입과 개혁에 있어 국민들의 인식 지형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환기시켜준다.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와 아울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정책은 그 속성상 시민들의 지지라는 정치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정책도 시민으로부터의 정당성 지지의 범위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권혁주(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 수단은 가치중립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선택되기 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이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때 정책 변화가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Page et al. (1992)의 관찰대로 정책의 위기는 시민들의 가치 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아울러 정책 태도의 지형을 살피는 작업은 시민들 사이의 인식적 “균열” 지점을 찾아냄으로서, 사회정책이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본연의 중요한 목표인 연대성의 실현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복합성과 복지국가의 과도기성으로 인해 사회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본 연구는 사회 정책을 둘러싼 시민들의 인식 지형을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지지에 기반

을 둔 안정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특히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집합적 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국가의 책무성을 누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정책의 설계에 큰 바탕이 되는 대상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해 누가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크게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국가간 혹은 시공간 차이에 주목하는 거시비교연구와 개인을 분석 단위로 태도의 차이를 보는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에 속하는 연구를 비교적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Busemeyer et al. (2009)은 14개 OECD국가를 비교했을 때, 소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계층 변수보다도 교육이나 연령과 같은 변수가 보다 강하게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영향력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는 Busemeyer (2012)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사회 맥락 변수가 교육 정책의 지출확대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정책 선호에 대한 계층 간 분열구조가 뚜렷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유사한 연구 맥락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김수완 (2011)의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과 국가의 책임성을 결과변수로 둔 다층모형 분석에서 거시변수라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공적 자원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미시변수인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후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분열이 낮아진다는 점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Hasenfeld et al. (1989)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복지국가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더해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비교적 견고하며 이와 같은 지지가 복지국가의 축소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80년대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정책에 태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로서는 김영모 (1980)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저자는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적 인식은 보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결론 지으면서 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설적 수준에서 제시했다. 김상균

외(1995)는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정치적 가치나 계층 변수가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력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안상훈 (2000)의 연구는 탈계급론적 맥락에서 복지 정책에서 접하는 개인의 지위에 따라 복지 국가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신광영 외(2003)의 연구는 전통적인 계급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계급간 복지의식의 차이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과 아울러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 보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로서 김영순 외(2011)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계급간 비일관성의 차이가 관찰되며, 특히 빈곤층에서 관찰되는 인식적 비일관성이 그들의 탈계급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사현 (2012)의 연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 경험의 수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과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정책 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를 축적해 온 것은 분명하나, 몇 가지 한계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 결과변수의 조작화 문제가 있다. 복지 인식이나 사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론적 배경을 두고 체계적으로 조작화한 연구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을 복지국가 전반이나 특정 정책의 확대 등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 문항 몇 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선택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많은 경우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복지국가와 사회 정책을 둘러싼 “정치”에 초점이 있다면 결과변수에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누락 문제가 많다. 이미 기존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성별, 가족 구조와 같은 주요한 인구학적 변수는 물론이고, 정책 경험과 기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연구 문제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모델을 구성하는 경향성이 짙었다.

셋째,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개인의 가치체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지지에 대한 의견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에도 영향을 받지만, Coughlin (1980)이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입장, 사회보장이나 노동과 관련한 윤리적 가치체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교적 이전 연구라고 할 수 있는 Hasenfeld et al. (1989)의 연구나 국내연구의 경우 김상균 외 (1995)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 모델에 반영했지만 오히려 최근 연구에서 그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은 하나의 의문이다.

넷째, 복지 영역에 있어 정부, 시장과 아울러 가족의 역할과 특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히 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기본적인 단

위로서 가족 제도의 역할이 여전히 강한 한국에서 이와 같은 변수를 누락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는 점은 개인 중심의 서구 연구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섯째, 사회정책의 “경험”을 변수화 하는 과정의 단순함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정책의 주요 급여 형태로서 현금과 서비스는 전달방식이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투입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정책에 대한 경험 유무를 넘어서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만족을 얻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설사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다할지라도 그 경험이 불만족스러웠다면 관련 정책에 대해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를 국가 책무성의 수준과 함께 정부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이 당면하는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으로서의 국가 책무성과 정책의 특성 변수인 보편성은 분리될 수 있는 인식적 차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부 책무성과 관련해 Salter (1998)가 제시한 정책 도구의 권리성을 분석한 이론적 모델을 차용하기로 한다. 둘째,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족의 특성 변수, 정책 경험 변수, 가치체계와 관련한 변수를 포괄적으로 모델에 투입하기로 한다. 셋째, 정책 경험과 관련된 변수는 현금 이전 경험과 사회서비스 경험으로 나누고 각각 경험의 크기와 질을 아울러 반영하는 변수를 구성하기로 한다. 따라서 현금 이전의 경우는 전체 소득에서 공적 현금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고, 사회 서비스의 경우는 비경험, 경험불만족, 경험만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분석 모델에 포함한다.

Ⅲ. 이론적 배경

Salter (1998)는 시민권과 정책수단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사회정책의 시민권적 성격이 국가와 민간이 각각 재정(finance), 복지제공(providing), 규제(regulation)의 세 영역에서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전달체계는 <표 1>와 같이 8개의 모델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권혁주 (2009)는 이와 같은 기능의 조합을 국가의 개입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으로 해석하면서 국가와 준정부 혹은 시장의 다양한 조합이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표 1〉 Salter의 복지 전달 모델

모델	재정(Finance)	제공(Provision)	규제(Regulation)
1	정부	정부	정부
2	정부	정부	민간
3	정부	민간	정부
4	정부	민간	민간
5	민간	정부	정부
6	민간	민간	정부
7	민간	정부	민간
8	민간	민간	민간

(Salter, 1998: 41)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정책 영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정부의 개입유형에 따른 사회적 권 혹은 정치적 성격의 반영과 관련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기로 한다. 각 사회 정책 영역에서 위 틀에서 제시한 세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사회 정책 영역에서의 사회적 권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관련 영역에 대한 집합적 개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의 책무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결과변수와 관련 있는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성 혹은 보편주의(universalism)란 사회정책의 급여 할당 원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회정책의 급여는 일종의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선별주의란 주로 자산조사(means test)의 통과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와 같은 인구학적 급여(demogrant)는 대표적인 보편적 급여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같은 정책은 대표적인 선별적 급여라고 할 수 있다.(Gilbert et. al., 2009: 89-91) 그러나 정책의 보편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Titmus가 지적한 것처럼 단차원적인 문제는 아니다. 예로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는 기여에 대한 요건을 묻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급여가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적 권리성”을 동시에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윤찬영, 2005: 221-222) 정책의 보편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정책의 보편성을 정책의 주요 대상자라는 “대상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부의 책무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크게 계급론적 논의, 탈계

급론적 논의, 신념체계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고전적인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계급론적 접근일 것이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갈등지점은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지닌다.(신광영 외, 2003: 40)

그러나 계급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Laclau et al.(1987)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계급적 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은 사회적 복잡성의 심화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높은 교육수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산층 및 전문직,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정책에 대해 복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Papadakis(1993)은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따른 수혜계층이므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반면, 주요 납세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지와 반대 입장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¹⁾ 그러나 이들의 주장도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에 계급이 지니는 영향력을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탈계급론적 시각에 입각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탈계급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대표적 학자로서는 Offe와 Beck을 들 수 있다. Offe(1987)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 감소가 노동계급의 수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임금근로 경험이 사람들의 의식에 미치는 독점적인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Beck(1994)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 증가와 개인주의의 확산이 계급적 균열이 지니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상훈(2000)이 제시한 “복지지위론”은 복지국가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의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균열 지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신광영 외, 2003: 43-45)

지금까지 언급한 계급론 혹은 탈계급론적 접근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계급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

1) 사회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는 Mishra(1990)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주요한 수혜층이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면 사적 영역으로의 “탈출(exit)”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아울러 또 하나의 이론적 흐름으로 개인의 가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Sears et al.(1979)의 “상징적 정치(symbolic politics)” 관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개인이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체계가 사회정책의 선호에 대해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인의 가치체계에는 정당에 대한 친밀도, 보수 혹은 진보에 대한 견해, 다양성에 대한 수용 수준, 인종적 편견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비슷한 연구 맥락에서 Coughlin(1980)와 Hasenfeld et al.(1989)은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은 사회보장과 노동윤리 등과 관련된 가치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계급 혹은 계층적 이익에 입각한 논의와 가치에 의한 판단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함께 취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Busemeyer et al. (2009)의 “개인은 사회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지지여부를 판단한다는 느슨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본 연구가 계급론 및 탈계급론적 접근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사회적 계층의 특성과 아울러 개인과 가족의 욕구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소득, 교육수준, 연령, 고용지위, 가족특성, 빈곤여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복지지위”와 사회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정책의 수혜경험이 더해진다. 한편으로 개인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수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사회보장과 노동윤리 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 개입과 노동유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IV.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자료와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 아울러 다양한 개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첫 번째 결과변수인 국가의 책무성은 7개의 사회정책분야(의료, 교육, 노인, 아동, 장애, 주택, 고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의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원조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마다 1씩 더하여 7개 부문의 전체 합을 사용하였다. <표 2>는 설문 결과에 따른 국가 역할과 책무성의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설문에 따른 요구되는 국가 역할과 책무성 수준

제공주체	재원조달	요구되는 국가 역할	책무성 수준
민간	민간	최소개입 혹은 질적 규제	0
정부	민간	서비스 제공	1
민간	정부	재원조달	1
정부	정부	재원조달 및 서비스 제공	2

두 번째 결과변수인 정책 대상의 보편성은 정부의 복지 시책의 대상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한 값을 사용하였다. 원래 설문 조사에서는 1점이 “전 국민 대상”, 5점이 “가난한 사람들 대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 대상의 보편적 성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표 3〉은 분석 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의 경우 연속변수를 카테고리화 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정책에 대한 태도가 연령에 따라 선형적 관계가 있기보다는 연령 그룹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의 경우 경상소득에 대한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소득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그 값을 취하여 모델에 투입하였다. 노동시장 참여 유형의 경우는 정규직이거나 자영자일 경우 “정규”로 분류했으며, 실업 및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불안정층”으로 나머지 집단은 “비경황”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빈곤여부의 경우는 분석 집단의 가구균등화 소득 중위 값의 40%미만일 경우 빈곤집단으로 분류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하였다. 소득 변수를 모델에 포함했음에도 따로 빈곤 여부를 투입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빈곤집단이 오히려 사회 정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지니는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표 3〉 분석 모델 투입 변수

변수	변수그룹	변수명	설명
결과 변수		정부의 책무성	7개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합계
		정책 대상의 보편성	5점 척도로 구성된 정책 대상 범위
설명 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여
		연령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교육	교육 연수
		소득	가구균등화 경상소득에 대한 로그 값
		노동시장 참여 유형	정규/불안정층/비경황
		장애인 여부	장애등급 3급이상 여부
		빈곤 여부	중위소득 40% 미만 여부
	가족 특성	가족 수	가족 구성 총인원

정책 경험	혼인 형태	미혼/유배우/사별 혹은 이혼
	현금 이전 수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 이전 비율
정치적 가치	서비스 경험	미경험/이용만족/이용불만족
	국가복지 견해	복지-근로의욕의 병행에 대한 7점 척도
	정치적 보수성	정치적 보수성에 대한 5점 척도
	정부역할 불만족 수준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정부 평가 평균
	불평등 인식	현재 소득분배 인식과 이상적 분배간의 인식 갭

본 연구는 이들 변수에 대해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결과변수인 국가의 책무성과 정책 대상의 보편성은 분포의 양상의 정규성이 낮고 변수값의 범위가 크지 않아 서열성을 띄는 카테고리 변수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서열변수를 결과변수로 할 때 적합한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 기법으로 선택하였다.

분석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회정책별로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태도에서 “균열”이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Busemeyer et al. (2009)나 Busemeyer (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이한 정책에 대해 선호가 집단별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양상이 관찰된다면 본 연구에서처럼 정부의 책무성을 7개 영역에서 총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접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피어슨의 잔차(Pearson’s residual)와 시각화 도구로서 모자이크 그림(mosaic plot)을 활용해 검토를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결과변수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관성을 띄고 있는 변수라면 두 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의 조합이 다른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접근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결과변수에 대한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V. 분석결과

1. 정책별 정부 책무성 인식의 상관성

<표 4>는 각 사회정책 영역 간 정부의 책무성 인식 수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3점 척도(0점, 1점, 2점)로 측정된 변수의 특성상 상관계수는 Spearman’s rho를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 정책 영역 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률적으로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면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 정책 영역별 책무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Spearman's r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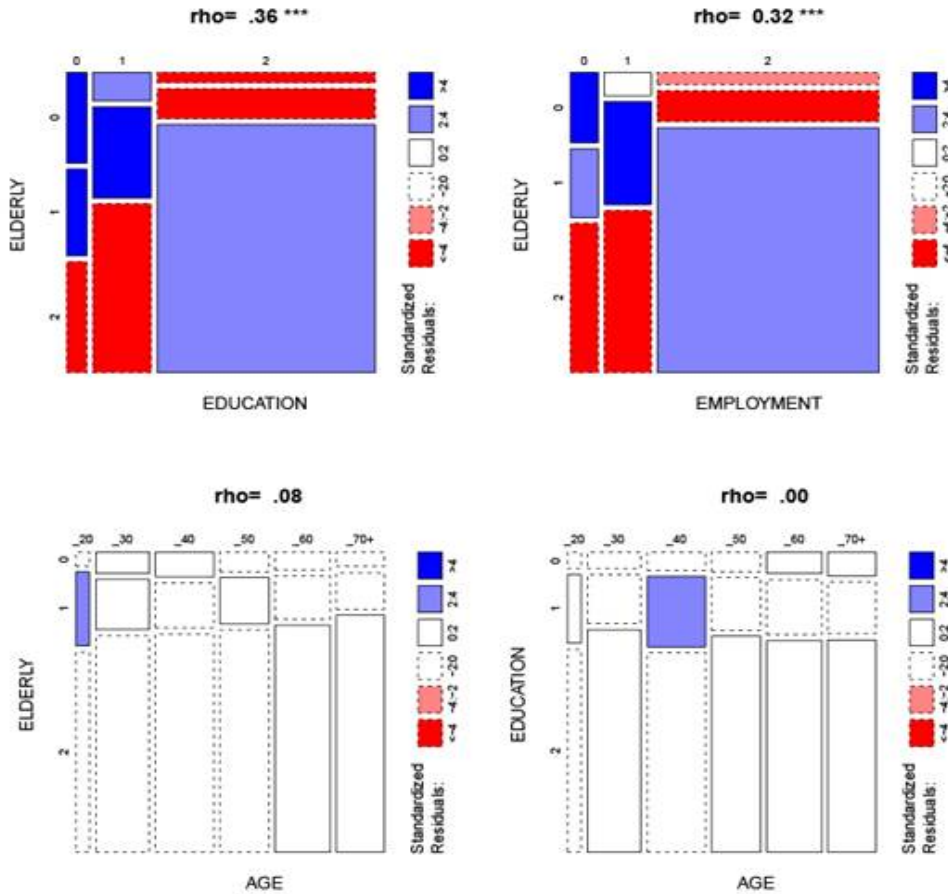
	교육	건강	아동	노인	주거	고용
건강	.43***					
아동	.50***	.38***				
노인	.36***	.40***	.54***			
주거	.41***	.26***	.57***	.44***		
고용	.32***	.28***	.39***	.32***	.43***	
장애	.21***	.27***	.31***	.40***	.27***	.29***

***, p<.001

<그림 1>은 위 상관분석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정책간 책무성 수준의 상관성 검토와 아울러 정부의 책무성 인식과 연령간의 상관성을 Pearson's residual을 활용해서 모자이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자이크 그림 내의 사각형의 크기는 각 셀에 속하는 케이스의 상대적인 크기를 뜻하며, 실선으로 묶여있는 채색된 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대값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점선으로 묶여서 채색된 셀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림 1>의 상단에 있는 두 그림은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각각 교육과 고용의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이들 정책을 비교하는 이유는 Busemeyer et al. (2009) 등의 연구에서 세대 간 균열 구조가 명확하다고 드러난 정책 영역이 노인관련 정책과 교육이었기 때문이며, 고용 또한 세대 간 정책에 대한 요구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비교를 하였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기대값보다 더 큰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며 이는 각 정책 영역간 책무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패턴은 다른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하단의 두 모자이크 그림은 세대별로 노인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 책무성의 인식이 다른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것이다. 그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대 간 두 정책의 지지 차이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책간의 균열구조를 전제로한 프로그램 특수적(program-specific) 접근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책무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정책안 정부 책무성에 대한 인식과 연령별 정책 지지에 관한 모자이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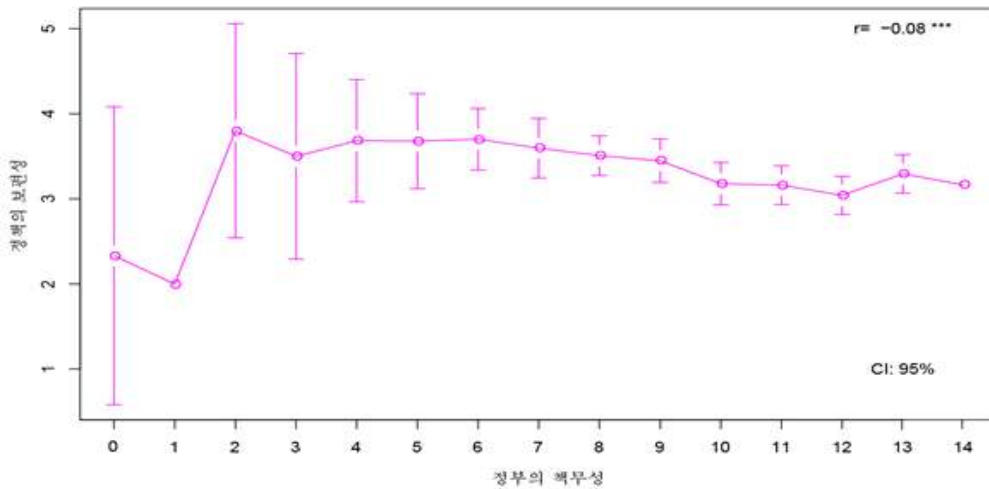


2. 국가 책무성과 정책 보편성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두 결과 변수인 국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은 정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오차 막대이다. 가로축은 정부의 책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오차막대는 책무성에 대한 수준별 집단이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평균값과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수 있는 95%신뢰수준에서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오차 막대의 경향성에 드러나는 것처럼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 간에 명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책무성이 높아질수록, 정책의 보편성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Pearson's r값이 -.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1$)에서 약한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약 0.6%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두 결과변수 사이에서 어떤 체계적인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변수는 각각 상이한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책무성과 정책 보편성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는 본 연구의 접근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2> 정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 인식간의 관계



3.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금부터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이어서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5>는 국가 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결과변수로 했을 때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20대를 기준 집단으로 했을 때, 30대와 60대 이상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 정책에서의 정부의 책무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생애주기에 있어 각각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연령이다. 3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결혼, 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경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연령대로서 고용지위나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높은 경제적 지출을 경험하고 있는 연령으로 볼 수 있다. 한편,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의 상실과 신체 기능의 저하 등 생활의 불안정성을 크게 느끼는 연령이므로 국가

의 개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정부의 책무성 인식에 대한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Exp(b)	sig.
개인특성	여성	-.063	0.94	
	30대	.277	1.32	**
	40대	.009	1.01	
	50대	.184	1.20	o
	60대	.188	1.21	*
	70대+	.392	1.48	**
	교육연수	-.039	.96	**
	소득	.000	1.00	
	불안정 고용	.262	1.30	*
	비경활	.035	1.04	
	장애인여부	-.102	.90	
빈곤 여부	-.181	.83	**	
가족특성	가족 수	.051	1.05	
	유배우	-.174	.84	
	사별/이혼	.082	1.09	***
정책경험	현금이전 대체율	.004	1.00	o
	이용만족	.662	1.94	***
	이용불만족	-.311	.73	**
정치적 가치	복지국가견해	.102	1.11	**
	보수주의	-.148	.86	**
	정부불만족	.007	1.01	
	불평등인식	-.055	.95	

o p<.1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을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은 통계적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으로 잡히는 계급 혹은 경제적 계층보다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Busemeyer et al. (2009)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한편, 빈곤층의 경우 국가의 책무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서 관찰되는 국가 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는 기존 연구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만 빈곤 계층이 경험하는 정보의 부족, 사회관계의 협소 등이 그와 같은 보수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정책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가 드러났다.

가족 특성 가운데서 사별이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경험과 가족의 규모는 국가의 책무성을 높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 해체의 경험을 당하거나 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의존 구성원이 증가하는 경우 가족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자의 경우는 자원의 손실, 후자의 경우는 비용의 증대를 중심으로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상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책무성을 높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경험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경험의 성질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으나 그 방향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경험 유무 자체가 단순히 중요한 것이라 서비스의 질에 따라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치적 가치 또한 사회 정책 영역에서의 정부의 책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시책이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책무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국가 책무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개인의 신념체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정책 대상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결과변수로 하여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우선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에서 보편성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연령집단이 정부의 사회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형태의 정책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납세층인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책무성에 대한 결과와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연령별로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 수준과 납세의 부담이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있음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둘러싸고 한국에서도 세대 간 복지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

〈표 6〉 정책 대상의 보편성에 대한 서열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Exp(b)	sig.
개인특성	여성	-.059	.94	
	30대	-.132	.88	
	40대	-.330	.72	**
	50대	-.407	.67	***
	60대	-.148	.86	
	70대+	.058	1.06	
	교육연수	.043	1.04	**
	소득	.000	1.00	
	불안정 고용	.002	1.00	
	비경활	.037	1.04	
	장애인여부	.058	1.06	
빈곤 여부	.168	1.18		
가족특성	가족 수	.181	1.20	***
	유배우	.139	1.15	
	사별/이혼	.307	1.36	***
정책경험	현금이전 대체율	.002	1.00	
	이용만족	.835	2.30	***
	이용불만족	-.285	.75	**
정치적 가치	복지국가견해	.022	1.02	
	보수주의	.056	1.06	
	정부불만족	-.029	.97	
	불평등인식	-.027	.97	

p<.01, *p<.001

교육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편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책무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여 정부의 책무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일단 정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 있어서는 그들도 포함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결과가 정책에 의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사고가 함께 작용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태도는 교육을 통해 사회 연대성이나 관대성에 대한 인식이 신장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가족 특성 변수에서 가족 수는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영향력이 있음이 포착되었다. 앞서 책무성에 대한 분석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면, 가족의 크기가 직접

적으로 정부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이에 대한 하나의 이 유로서,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면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욕구의 조합이 다 양해지는 내적 이상성의 증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보다 다양한 계층과 욕구를 아우르는 정 책에 대한 지지는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별 및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경험은 정부에 대한 책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보편성을 지지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 태도에 가족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경험의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정책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책무성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에 있어 만족 한 경험을 한 경우는 정책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지지적이지만, 불만족 경험은 오히려 보편 성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은 향후 사회 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방안을 체계적 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정부 책무성의 경우 복지 정책과 근로 동기의 조화에 대한 판단과 정치적 보수성과 같은 가치판단 변수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위에서 보았다. 그러나 정책 대상의 보편성 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식적 지평 하에서 복지국가 혹은 정치적 성향에서의 전향성이 반드시 보편적인 형태의 정책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발전주의적 산업화 경험과 연관지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적극적 혹은 “강한 국가”의 요구란 반드시 재분배를 중심으 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장과 같은 다른 가치의 적극 적 실현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표 7>은 지금까지 살펴본 회귀 분석 결과를 통계적 유의도를 중심으로 요약 비교한 것 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이론적 논의와 관련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으로 측 정된 계급 혹은 계층 수준이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어도 선형적인 차 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소득의 영향력은 두 결과변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이 정부의 책무성을 더 강하게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자의 경우는 오히려 두 변수 모두에서 부정적인 태

〈표 7〉 분석 결과의 요약

	정부의 책무성	정책대상의 보편성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교육	--	++
불안정 고용자	+	
빈곤자	--	
가족 수		+++
사별/이혼 경험자	+++	+++
서비스 만족 경험	+++	+++
서비스 불만족 경험	--	--
복지-근로동기 조화	++	
보수주의	--	

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계급간 분열이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수준으로 관찰되지 않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적어도 사회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정책 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계급중심적인 접근이 지니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탈계급적 논의와 관련된 변수들이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드러났다. 두 결과변수 간 통계적 유의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령, 가족 특성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사회정책 경험의 질은 두 결과변수 모두에 일관된 방향으로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의 영향력이 포착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변수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에 전통적인 계급 관련 변수를 넘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정책이 대응하는 욕구의 유형과 분포가 그만큼 다양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전제로 한 현금 중심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연령과 가족 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체계의 구축을 핵심으로 한 복지국가 전략이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보수주의와 정부 개입의 대한 가치 판단과 같은 가치체계 혹은 상징적 정치 체계도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익 추구 혹은 욕구에 대한 고려와 아울러서 가치체계의 지형을 고려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가치체계의 영향력이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포착되었지만, 정책대상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신념체계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함의를 준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합리적 기대, 욕구 수준, 정책의 경험과 같은 변수의 일반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빈곤집단에서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이는 정책 태도와 관련된 영향 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의 누락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 빈곤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특성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입변수들의 주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역할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메커니즘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이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변수가 다른 지위 변수와 결합되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간 균열구조에 대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이와 같은 균열구조의 발견을 이끌어낸다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혁주. (2009).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4), 1301-1320.
- 김사현. (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9-38.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4), 1-33.
- 김수완. (2011).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2), 251-278.
- 김영모. (1980). 韓國人の福祉意識. 서울: 一潮閣.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 사회, 211-240.
-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인식: 사회계층별 복지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 복지학. 43, 193-221.
- 윤찬영 (2005)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
- Busemeyer, M. R. (2012). Inequal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 An analysis of individual preferences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219-240.
- Busemeyer, M. R., Goerres, A., Weschle, S. (2009).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of demographic age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195-212.
- Coughlin, R. (1980). *Ideology, Public Opinion, and Welfare Policy*.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Hasenfeld, Y.,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Korpi, W. (1980). Social policy and distributional conflict in the capitalist democracies. A preliminary comparative framework. *West European Politics*, 3(3), 296-316.
- Kwon, H. J. (2005).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Development and Change*, 36(3), 477-497.
- Laclau, E., Mouffe, C. (1987)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CLXVI, 79-106
- Mishra, R. (1990)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Gilbert, N., Terrell, P. (2009).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7th ed* (Vol. 7th ed). Boston: Allyn & Bacon.
- O'Connor, James.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 Offe, C., Keane, J.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1st MIT Press ed* (Vol. 1st MIT Press ed). Cambridge, Mass.: MIT Press.
- Page, B. I., Shapiro, R. Y. (1992). *The Rational public :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Illinois: Univ. of Chicago.
- Papadakis, E.(1993)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249-270.
-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143-179.
- Salter, B. (1998).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Welfare - the case of the NH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3(3), 56-69.
- Sears, D. O., Lau, R. R., Tyler, T. R., Allen, H. M., Jr. (1980). Self-Interest vs. Symbolic Politics in Policy Attitudes and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70-684.
- Titmuss, R. (2006). Universalism versus Selection. In C. Pierson & F. G. Castles (Eds.), *The Welfare State Reader*. London: Polity
- Weaver, R. K.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371-398.

ABSTRACT

A Study of the Factors of Policy Attitudes: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the Universality of Policy in Social Policy Areas

Beop-rae Ro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factors in citizen attitudes towards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the universality of policy in the social policy of South Korea. The bulk of the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hey also have some limitations in spite of their practic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is issue. The lack of theoretical basis in measuring policy attitudes, omission of key variables, and some measuring problems were found in previous studies. Salter(1998) and Kwon(2009)'s theoretical framework is used for operationalization in this stud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found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using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in an attempt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Keywords: policy attitudes, social policy, government responsibility, universality】